

59년만의 4차 추경 현실화... 여야 공감대

민주·통합당 수해 현장 방문... 주호영 "반대 않겠다"

김태년, 재난예비비 확대 가능성 시사... 당·정 온도차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경예산(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나섰다. 당장 온도를 낮추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에 59년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 수해 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하지만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 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고 밝혔다. 추경과 별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재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

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음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4차 추경에는 호응하는 모습이 많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를 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김종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추경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재난 대응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고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도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장은 "추경 여부를 결정하려면 당정이 일단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해야 한다"며 "내일 협의에서 추경 규모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 이대로 어대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수해에 선거운동 중단... 김부겸·박주민 반격 기회 줄어

전국적인 역대급 수해로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당권 주자들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지난 주말 예정됐던 광주·전남, 전북 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치러지지 못한다. 전방적인 전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경쟁 열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권 경쟁 구도에 있어 이낙연 후보는 기존의 우위가 유지되는 반면, 추격에 나서고 있는 김부겸·박주민 후보 측은 반격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당내서는 이런 상황이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어대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라는 말까지 나오던 상황이 더 굳어지면서 후보 주자들의 막판 뒤집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의 한 관계자는 "국민과 공감하는 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에 후보와 캠프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중단을 제안했다"며 "재난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적극적인 선거전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대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 수해까지 겹치면서 선거 운동을 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지만 참 답답하게 됐다"고 초조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주민 후보 캠프 관계자도 "전대가 이슈화되고 쟁점들이 생겨야 후보주자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수해로 선거 운동이 중단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4대강·태양광 공방 수해 책임 놓고 국조 언급

여야가 11일 이번 폭우 피해와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으며 보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실증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평가의 목소리를 키웠다. 송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피해가 최소화했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했다. 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쟁점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연합뉴스

與 "표준임대료 도입, 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홍군 백혜련 박상혁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에 의원 주최로 임대차3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 분쟁조정기구 도입 등 제기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군 의원은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떼지만 뒤쳐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

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은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 빠진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을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인상률에 연동하거나, 별도 심의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4년(2+2)으로 정해진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필수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부겸 "호남 합동연설회 취소 안돼"

캠프,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기록적인 폭우에 당이 호남과 충청 지역 후보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취소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부겸 후보 선거캠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호남과 충청지역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전면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 전진위는 전국적인 비 피해가 이어지자 호남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지 않고, 온라인 연설로 대체하기로 했

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후우 피해로 인해 취소한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호남과 충청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선거마다 당의 승리를 가져다준 결정적 승부처인데, 합동연설회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호남과 충청의 대의인, 당원에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TV토론회까지 취소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부터 수도권 대의원대회 개최 전인 8월 중순경이라도 호남과 충청에서 합동연설회를 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늦추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180일 전으로 선출 시기를 변경할 경우 정기국회 기간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또 발생해 손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은 선거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에 여성 30% 할당을 당헌·당규에 규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당내 공식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 공식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에는 여성을 각각 50%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	정	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교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교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일: 2021. 1. 18(월)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목회학과(D.Min.)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8. 5(수) ~ 14(금)
- 전형일: 2020. 8. 19(수)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